

大學教育의 大衆化와 그 課題

李 宗 宰

(서울大 教育學科)

문제의 제기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 사항이다. 의·식·주의 문제와 같은 수준에서 교육은 기본적인 삶의 한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도 그 격이 낮추어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논란의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러한 教育熱은 오도된 사회적 낭비의 요인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그 방향만 잘 잡혀진다면 教育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資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 방향에 대한 合議의 수준이 낮고 사정의 변화에 따라 우왕좌왕할 때 우리의 교육은 문제의 原點을 맴돌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착실한 교육의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제기되었던 교육의 문제나 社會的 爭點으로 부각된 교육의 논의들

보던 그 논의와 쟁점의 대부분이 ‘大學의 문턱’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논의, 충격적인 시도, 축적된 경험 위에서 反省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정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方向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不分明한 미로에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교육의 한 斷面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온 족각을 그 쪽으로 돌리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시 방향 전환을 한다. 교육 문제를 들여다 보고 발전적으로 헤쳐 가기 위한 논의의 中心을 찾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돌아보면, 1970년대 중반에 재수생의 적체와 누적 현상에 이어 재수 행위를 억제하다 보니 當年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課外 工夫가 1970년대 후반에 극렬해졌고, 7·30교육조치로 과외를 금지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大入定員을 확대해 보니

이젠 大卒者의 求職難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꾸어 놓으니 세삼 高校平準化政策까지 시비가 재연되어 國論이 兩分된 실정에 있다. 이 모든 문제와 쟁점들은, 따져 보던 大學의 문턱에 걸려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25년 전만 해도 ‘콩나물教室’이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교육 문제도 어떻게 보던 발전하였고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 次元 높이 성숙하고 다음 단계의 教育課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大學의 문턱에 걸려 있는 이러한 문제를 卒業하고 넘어셔야 한다.

大學의 문턱에 걸려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大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指向과 論理가 교육 문제를 규정하는 概念體系에서 그 中心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論壇의 토

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대학교육의 指向論理를 大衆化體制의 立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주어진 論題와 같이 “大衆化體制와 엘리트體制間”의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大衆化 추세 속에서 大學敎育의 指向과 課題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려 한다.

大學敎育의 大衆化 추세

대학교육의 大衆化(mass higher education)라는 개념은 Martin Trow가 고등교육의 발전 단계의 모형을 설정하면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美國과 유럽제국의 고등교육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우에 엘리트 중심의 고등교육이 中等敎育의 보편화 이후에 大衆化 단계를 거쳐 이제 보편화(universal higher education)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대중화의 단계를 흔히 해당 적령인구 취학률이 15%에서 50%에 이르는 수준에서의 고등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적 현상을 초래하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로서 大學敎育 大衆化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된 기초 위에서 걸증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要求를 걸진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高等敎育의 內容을 高等敎育需要者의 수준과 必要에 적응하는 과정의 고등교육으로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이제 엘리트체제와 대

중화체제 속에서 어느 한 쪽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大學敎育의 대중화 추세 속에 흘러왔으며 돌이킬 수 없는 추세 속에서 大學의 문턱에 걸려 있는 과제를 풀어야 할 지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취학률이 85% 수준을 넘어서서 보편화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1968년부터 시작된 中學校無試驗進學制度와 1974년부터 시행된 高校平準化施策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매년 급성장하였고 학생인구의 下向的 擴大 구조 속에서 중·고등학생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의 高度經濟成長 기간 동안 대학 진학희망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대학진학 수요는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였다. 대학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合理的 論理와 정부의 강력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고등교육인구는 7배로 성장하였다. 放送通信大學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1970년의 18만 명이 1984년에는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78년 이후 6년 동안에 90만 명이 증가하였다. 취학률도 1970년의 9.7%에서 1984년에는 32%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의 반도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90% 정도가 대학진학을 희망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응시하는 학생은 고졸자의 60% 정도이고 응시자의 38%만이 대학에 들어갈 뿐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4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255校로 이 중에 4년제 대학은 110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5년 동안 계획된 결과인지 상황적 결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大學이라는 이름의 학교도 大學이라는 同質性의 核에 수렴되기 보다는 異質과 多樣化의 分散의 방향으로 변하여 온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이미 대중화 추세 속에 들어와 있으며 이 추세는 우리가 항해할 때 타고 가야 할 물의 흐름과 같다. 내일의 대학교육도 오늘의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原點에서 새로운 합리적 계획으로 모색될 수 없듯이 대중화 추세를 거슬러 간다는 것은 非現實的일 것이다.

大學敎育의 哲學不在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당분간 大入定員을 동결한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를 反轉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대학교육에 대한 政策의 발표를 듣거나 “大學은 大學다와야 한다”는 논의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대학의 모습을 볼 때 大學敎育을 논하는 논의의 求心點을 찾기가 어렵다. 한 쪽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종잡기 어렵고 앞으로 大學의 발전을 무시해 볼 수 있는 개념 구조도 모호하고 발전의 모습에 대한 비전도 흐릿하다. 마치 變數만 모여 있는 방정식 같아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變數間의 관계가 정립되고 常數와 係數가 찾아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論議의 求心點이 분명치 못하고 概念構造가 모호하고, 비전이 불투명한 이 현상을 좀 거창하게 표현해 본다면 大學敎育의 哲學이 不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大學敎育의 哲學이 모호한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大學敎育이 大衆化 단계에 돌입한 이후에 大學敎育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과 논란을 거쳐, 大學의 本質과 理想에 대한 탐색과 논의를 거친 바 있다. 大學敎育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는 우리의 경우 매우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定員政策, 入試制度, 學問의 發展 등의 긴급한 各論의 논의를 넘어 줄 大學敎育에 대한 基本的 觀點과 方向에 대한 논의와 求心點의 형성은 迷路에 빠진 方程式을 풀어 주는 常數와 係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敎育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몇 가지 質問을 제기하고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봄으로써 논의의 중심점과 大學敎育에 대한 基本的 觀點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大學의 本質에 관한 문

제로서 本質의 意味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大學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두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大學敎育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大學敎育을 받을 수 있는가, 大學敎育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처럼 大學敎育의 기회보다도 수요가 만성적으로 초과할 경우에 大學敎育의 기회는 수요에 대응하여 확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統制되어야 하는가, 統制되어야 한다면 누가, 어떤 論理에 의하여 어떻게 통제하여야 하는가이다.

네째로 大學敎育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이상의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基本觀點의 바탕이 되는 그 근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一貫性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敎育의 大衆化論理

大學敎育 大衆化의 추세는 大學敎育을 받고자 하는 多數(mass)의 敎育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에서 大學의 本質, 역할, 기능이 多樣化해 가는 추세를 의미한다.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大學敎育의 大衆化論理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건간에 우리는 이미 反轉할 수 없는 大衆化 추세 속에 있으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大學의 本質과 理想을 추구해 가려는 입장이다.

대중화의 논리에서는 大學의 본질로서 標準化된, 진리 탐구의 도장으로서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아탑의 이미지를 부정한다. 대학은 어떤 기준에 의하든지간에 더 이상 特定 少數의 진리 탐구를 위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大學의 意味는 大學, 즉 커다란 배움(great learning)으로서 在明明德하고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하는 大學之道를 추구하는 동양고전의 관념에서든 혹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독일의 古典的 大學의 관념에서부터 日常의 지극히 세속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實用的 가치에 이르기까지이든 다양한 개인의 능력, 욕구,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확대할 수 있는 수월성만 추구될 수 있다면, 그 형태와 성격이 무엇이 되든지간에 大學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社會는 수많은 機能과 역할의 복합체로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相互依存的, 補完的 관계에서 사회는 변화하며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多樣한 각 기능과 역할의 변경(boundaries)을 확대하고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大學의 本質로 삼고 있다. 따라서 大衆化의 논리는 大學敎育의 多樣化와 각각의 차원과 영역에서 수월성의 추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大衆化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大衆化와 수월성의 추구를 위하여 大衆化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大學이

라는 이름 아래 어떤 특성의 유행과 기능을 담당하는 大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 추구의 엘리트체제의 大學에서부터 각종 각양의 통상적 관념으로 볼 때 대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大學까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이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大衆化 속에서 多樣化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논리는 多元的 平等指向的 社會가 추구하는 교육의 조건이 된다.

누가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大衆化 논리에서 볼 때, 대학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 교육내용 속에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수요를 충족할 만큼 기회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意味 있는 能力의 差異에 의하여 선발이 불가피할 뿐이다. 大衆化 논리에서는 수요가 存在하고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기회는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을 받겠다는 요구는 個人的인 의사결정의 문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선택의 自律을 존경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責任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營利追求나 사회의 公益을 훼손하지 않는 한 教育創業과 수월성의 추구에서 自律과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大衆化

논리는 大學教育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선택의 자유와 自律的 意思決定, 그리고 교육의 公共性과 역시 수월성의 추구를 필요조건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대중화 논리를 따져 볼 때 대중화 체제는 多數를 대상으로 하는 下向的 平準化의 대학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대중화 추세에 전제 위에서 多樣性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논리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와 제공하려는 자의 自律과 책임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多元的 平等指向 社會를 위한 교육적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대중화 논리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건으로 自律과 責任을 自生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억압적 統制보다는 育成的 助成을 또 하나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韓國 大學教育의 모습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중화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투영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대학의 명칭, 규모, 설립자, 특성, 교육의 내용에 따라 각양 각색의 大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뿐만 아니라 경찰대학, 세무대학과 같은 직업적 대학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科學技術大學, 또는 규모는 적으나 미국의 MIT 나 Cal Tech

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학생 몇십 명을 두고 있는 고려청자大學院 같은 학교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公益에 기여할 수 있고 어느 영역에서든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企業의 創業과 같이 學校의 설립을 教育創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은 韓電산하의 어느 기관에서 비공식으로 적장내에 大學院과정을 개설한 것이나 포항제철의 工科大學 설립은 이미 多樣化의 가능성과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학의 설립을 통제할 이유가 없고 政府의 재정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 한 教育創業을 후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치가 없는 大學엔 학생이 모이지 않을 것이고 경쟁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質的 統制가 가능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의 大學이건 진학하려 할 때 그 개인이 원하는 한 진학 희망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교육을 하지 않는 한 진학의 요구는 개인의 自律에 맡기고 정부와 사회는 취직의 문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처럼 物理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때에는 택시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個人은 사려 깊게 행동하고 최선의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던 될 것이다.

정부는 大學에 직접적인 간

쉽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自律의 여유를 주어도 교육의 수월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公益과 敎育의 公共性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한 大學間의 경쟁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生存하기 위해서 大學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劃一적인 기준에 매어 놓게 되니까 主人意識도 없어지고 경쟁의 필요도 없어져, 결국 他律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敎育의 公益과 公共性과 수월성의 추구라는 가치에 대한 합의 위에서 무엇을 가르치건, 무슨 學科를 개설하건, 학생을 얼마를 어떻게 뽑건, 등록금을 얼마를 받건 自律에 맡긴다고 할 때 무슨 큰 일이 날 수 있겠는가? 主人意識이 없이는 수월성의 추구는 어렵다. 주인의식은 自律의 토대 위에서 발휘되지 않는가? 大學 교수들 채용할 때 大學의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초빙하고 스카우트한다는 생각이 희박한 오늘의 현실은 他律과 무기력한 무경쟁 속에서 수월성의 추구를 포기한 風土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대중화 추세 속에서 大學敎育에 대하여 정부가 합리적 구상과 계획 아래 통제하여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自律과 경쟁의 토양 위에서 몇 가지 중요한 原則만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때의 득이 훨씬 클 것이다. 대중화 추세에서 누구나 웬만하면 대학 졸업장을 갖게 되고

이 졸업장으로써 劃一的으로서 열이 정하여지거보다는 관련된 영역에서 개인의 수월성의 표현으로 빛이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일적 기준에서는 수직적으로 上向적인 학력인플레이가 발생하지만 수평적으로 분화 다양화된 구조 속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수월성의 별을 향하여 의미 있는 경진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본다면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 대중화의 논리의 중심점을 다양성과 수월성의 추구에 두는 데서 한국 대학교육의 철학을 정립해 가야 할 일이 남아 있다. 후속되어야 할 교육정책의 과제는 다양성, 수월성의 方向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간에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自律과 경쟁의 원칙으로 敎育의 質的 統制를 이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끝으로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리와 관련하여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 한 제안을 시도해 보려 한다.

制度的으로 선택할 수 있는 補充的 努力은 長期的, 그리고 短期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長期的 課題로서 現行 大學入試制度는 補充되어야 한다. 대학입시는 일종의 선발고사이면서 韓國敎育의 方向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理想的으로 추구하고 있는 敎育의 成果의 측면 (Excellence) 에, 多樣性을 추가하여 이 조건에 對應하는 能力을 표준으로 하여 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方案은 별도의 研究를

필요로 한다. 한 試案으로서 제시한다면, ① 大入學力考查와 高校內申, 그리고 大學別入試를 均衡 分配하여 이 三者간에 大學入學의 선발권이 三權分立이 되도록 하는 일, ② 大學別 考查에서 本考查의 부활과 領域別 論文型考查(국어뿐만 아니라 英語, 數學, 社會系列과 科學系列에서도)의 실시, 學科別로 고사과목과 점수 배정을 하도록 하고 學科의 견해를 反映하여 大學間에서, 그리고 大學內에서도 多樣性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學科에 따라서는 面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自律化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大學入試에서 高校內申과는 별도로 高校에서 學校敎師全體會議에서 1校에 1명씩 대학에 입학할 추천하는 추천제를 실시하여 大學別로 그 定員의 30% 정도는 高校의 內申성적 등급이 아닌 高校 추천에 의하여 入學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1校가 大學別로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다. 이와 함께 정원의 5% 정도는 成人이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환갑을 넘은 할머니가 大入 학력고사를 거쳐 大學에 입학했다는 것이 대단한 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나, 이것은 교육의 평포요, 맹목적인 객관주의의 남용이요, 敎育 後進性의 한 斷面에 지나지 않는다. *